

사부대중과 함께 새역사 써내려간 종단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8년간 갈등은 소통과 대화로 풀고, 사회 문제는 불편부당한 중립적 위치에서 중생의 이익을 앞세우는 화평 원칙으로 해결하며 한국불교사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종단운영 기초를 밝히는 총무원장 스님.

**144건 종단 법률 제개정
국가 법령 개정, 불교 위상 높여
문화 유산 분야서도 놀라운 성과**

**사회 갈등 현장 찾아 해결책 모색
어려운 사람들 앞다뒀 종단 찾아
밖으로 따뜻한 손길 내부는 개혁
대화 소통으로 종단 현안 해결**



위에서부터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각계 각종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부대중 공사 모습. 팽목항에서 회생자들을 천도하는 스님들, 중앙총회에서 새신 임명 취지를 설명하며 협조를 당부하는 총무원장 스님.

종단 변화와 안정 이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재임 8년 임기 완료를 앞두고 있다. 오는 10월 12일 제35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새 총무원장 스님이 선출되면 스님은 인수인계 기간을 거쳐 총무원장 소임을 마무리한다. 현 총무원장 스님의 임기 만료는 단순하지 않다. 한 마디로 역사적인 순간이 된다. 총무원장 스님은 두 가지 종단사에 큰 자취를 남긴다. 최장수 총무원장이다. 8년 임기를 채운 총무원장은 전무하다. 그리고 종단사 최초의 재임 총무원장이다. 서의현 전 총무원장 스님도 재임을 했지만 정상적인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하차했다. 반면 자승스님은 4년, 4년 두 번의 임기를 정확하게 채운다.

1962년 통합종단 출범 이래 34대 총무원장을 지내는 동안 총무원장 자승스님처럼 법에 규정된 대로 정상적으로 재임 기간을 채우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총무원장은 짧게는 2개월에 그칠 정도로 불안정한 자리였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채운 스님도 거의 없었다. 1994년 현 종현 총법이 만들어진 이후 선거를 거쳐 정상 취임하고 임기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퇴임한 것은 제32대 지관스님이 처음이었다. 그리고 이번에 자승스님이 두 번째가 된다. 월주스님은 임기 만료 며칠을 앞두고 정화개혁회의가 총무원 정사를 강제 접거하고 퇴진을 요구하는 바람에 안타깝게 임기를 다 못 채웠다. 고산스님은 사법부의 오판으로 인해 1년도 안돼 물러났으며, 정대스님은 10개월을 남겨두고 동국대 이사장으로 가는 바람에 중도 하차했다. 법장스님은 임기 중에 임직했다. 지관스님이 처음으로 임기를 제대로 마쳤다. 그만큼 우리 종단사는 법에 규정된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는 당연한 일이 엄청난 사건이 될 정도로 불안정했다.

대화 통해 종단 화합 이끌어

현 총무원장 스님 이전에 가장 장수한 총무원장은 서의현 전 원장이었다. 스님은 1986년 8월 전임 녹원스님이 동국대 이사장으로 가면서 총무원장에 취임한 뒤 1990년 재임에 성공했다. 처음으로 4년 임기를 채운 총무원장이 됐다. 서 원장은 그러나 1994년 임기 만료 6개월 가량 앞두고 무리하게 삼선을 꺾었다. 종단개혁 운동에 밀려 중도 하차했다. 8년 임기를 못 채운 것이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재임 8년은 반세기 넘도록 혼란했던 종단사에 종지부를 찍는 역사적인 순간이 된다. 종단이 비로소 혼란과 비정상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안정적인 임기는 곧 안정적인 총무행정으로 이어진다. 짧은 임기, 불안한 종권으로는 제대로 일할 수 없다. 안정된 임기는 총무행정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다는 의미다. 총무원장 스님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그 의미와 그간 지나온 행적을 돌아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간 어떤 일들을 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 살펴보고 지난 8년간 결에서 지켜보고 혹은 함께 했던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순간 순간을 돌아본다. 자승스님을 시작으로 법에 규정된 임기를 마치고 정상 퇴임하는 일이 더 이상 역사가 되지 않고 아무렇지 않은 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담았다.

33대 집행부는 출범과 함께 4대강 문제를 시작으로 한진중공업, 쌍용자동차, 용산참사, 제주 해군기지 등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회문제들을 풀어내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해왔다. 집행부가 출범한 2009년 이후 8년째 접어들어 현재, 돌이켜 보면 사회 대립과 갈등의 현장에는 늘 불교가 있었다.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이 쌍용차 해고노동자 농성장을 방문하고 결사추진본부장 도법스님이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을 위해 노동부 앞에서 108배를 하는 등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어느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불교 관점에서 사태를 해결하려는 이러한 노력은 시민사회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불교적 대안 모색을 통해 사회통합과 국민화합을 이끌어 내는데 일조했다. 취임 초기부터 관심 갖고 힘써온 용산참사 문제는 구속된 철거민들이 특별사면으로 풀려나면서 주목할 만한 결과물을 만들었다.

국민화합에도 일조

회사나 노조 어느 일방의 편을 들지 않았다. 노동자와 사용자, 진보와 보수라는 이분법적 관점에서 벗어나, 극단의 논리를 극복하고 화해의 접점을 찾는 화쟁사상과 생명평화의 관점으로 접근했다. 그리고 불교의 이름으로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은 '조계종 노동위원회' 출범이라는 결실로 나타났다.

분열과 갈등이 있다면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종단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찬반 갈등을 겪고 있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수년째 찬반 갈등이 지속되면서 찢긴 공동체를 복원하고 화합을 위한 중재자로 나섰다. 환경파괴 논란을 일으킨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여야, 시민사회, 종교계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4대강 사업 국민적 논의기구'를 만들었다. 비록 정부가 사업 예산을 날치기로 통과시켜 구체적인 결실을 보지 못했지만, 사업의 주요 당사자들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8년 재임의 역사는 소통과 화합을 통한 종단 안정에서 만들어졌다. 총무원장 스님은 중앙총회를 중심으로 하되 교구본사, 원로회의 등 종현 공식 기구 뿐만 아니라 선원 강원 올원 대표 및 각 지방에서 활약하는 총재가 자들까지 아우르는 대중공사를 통해 중요 현안을 논의하고 여기서 나온 안을 행정으로 삼고 입법화 했다. 대화의 무대가 마련되는 것

만으로도 갈등은 사라지고 화합과 통합의 무대가 열렸다. 총무원과 교육원, 포교원, 중앙총회가 서로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사부대중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적 과제가 무엇인지 논의하고 실현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직영사찰 지정, 백양사 도박사건, 서의현 전 원장 사면, 동국대 문제 등 종단 안정을 위협하는 일들이 많았지만 모두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반대 의견도 수렴하고 지혜를 모았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게 끝없이 대화하고 설득하며 의견을 들었다.

8년 최장수 최초 재임의 역사는 이처럼 대화와 소통, 화합, 대중공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 종단 역사는 막강한 권력을 통한 철권통치도, 선지식의 권위도, 대중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교훈을 보여주었고 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강압도 권위도 아닌 대화와 소통, 대중공의를 통해 종단을 안정시켰다.

종단이 안정되자 밀린 숙제가 대부분 풀렸다.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8년간 중법령 제·개정 수가 144건에 이르렀다. 종단 대립과 갈등으로 진전을 보지 못했던 과제들이 해결된 것이다. 종단이 안정되고 화합하자 한국불교 위상이 저절로 올라갔다. 지난 반세기 동안 종단과 전통사찰을 구속했던 각종 국가법령 개정에 많은 성과를 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전통사찰 농지 보전담당감 감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전통사찰 증축 제한 완화, 산지관리법 개정을 통한 사찰내 내 공공시설 허용,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비롯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통해 석가탄신일이 부처님오신날로 명칭이 변경될 예정이다.

공론의 장으로 나온 갈등

승려복지제도가 시행됐다. 법원관리법도 제정됐다. 법원은 사회적으로 많은 역할을 하면서도 종단 관리 바깥에 놓였었다. 긍정적 기능 못지 않게 부정적 요소가 드러났다. 승려노후 등 종단이 책임지되 스님들은 종단에 의무를 다하는 문화가 조성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고쳐야 할 점은 산적했다. 아무리 종단이 안정되고 총무원이 고군분투한다 해도 내부 자정 쇄신이 없으면 모래 위에 세운 누각과 같다. 그러나 내부 결사는 쉽지 않다. 제도는 법 제개정을 통해 고치고 국가 법령은 정부와 협상을 벌이던 되지만 자성과 쇄신은 자신과의 싸움이다. 보이지 않는 내외의 전쟁이다. 제33대 집행부 때인 2011년 자성과 쇄신결사운동으로 '수행결사' '문화결사' '생명결사' '나눔결사' '평화결사' 5대 결사를 내걸고 종단 각 영역에서 혁신을 추진했다. 그 결과가 총무행정에 반영된 것이 2012년 '사찰예산회계법' 제정,

'사찰운영위원회법' 개정 등을 통한 투명한 사찰 운영이다.

사찰예산회계법 제정은 단 하나의 금전적 틀을 보이지 않으려는 종단 자성과 쇄신이 반영된 결과물이었다. 이 역시 과거 같았으면 논의만 무성하고 총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총무원장 스님의 총회의원 한 명 한 명마다 연락하고 만나서 설득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노력이 있었기에 그 많은 법률이 만들어지고 개정됐다.

정부와 관계 설정도 변화

국가 정부와 관계에서도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국가 지정 문화재의 70%가 불교 성보이며 민간 영역 중 가장 많은 토지를 소유한 우리 종단은 정부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정부는 지원금을 빌미로 갑의 관계에서 불교를 대했다. 이 관계가 1994년 종단 개혁 이후 대등한 관계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었다. 정보와 인적 역량, 전문성에서 정부와 비교가 되지 않았다. 모든 행정을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이는 치명적 약점이었다. 우리 종단은 또한 실무자들의 잦은 교체로 문화재나 토지, 공원 등에서 전문성을 제대로 획득하기 어려웠다. 이 문제를 제33대, 34대 집행부는 불교와 관련된 정책 분야에 우리측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으로 해결했다. 그간 정부가 선거 공신 뒤편으로 할당하던 자리를 종단에서 가져오는 과정은 험난했다. 종단 안정에 바탕을 둔 총무원장 스님의 의지와 관심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쾌거였다.

문화재위원회가 대폭 늘어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불교와 관련된 정부 정책이 어떻게 수립되며 진행되는지를 이제 우리 측 전문가가 직접 집행함으로써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보 취득력이 강화되고 정부와 소통, 협상력도 높아졌다. 각종 불교 관련 국가법령 개정은 이러한 노력의 산물이다. 화재와 도난 예방을 위한 전국 사찰 방재사업, 연등회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삼화사와 진관사 국행수륙재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통도사, 부석사, 봉정사, 법주사, 마곡사, 대흥사, 선암사 등 '한국의 전통사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문화재청, 경찰청과 함께 '불교문화재 도난 예방 및 회수를 위한 협약', 정부 소유 성보의 사찰 환원, 문화재보존처리 시설 설치 등과 같은 성과는 8년 간 종단이 펼친 노력의 결과다.

대화와 대중공의를 통한 소통과 화합이 안정적 종단을 만들고 지도자의 강력한 의지와 결단 추진력은 대외 협상력을 높여 수많은 성과를 내고 새로운 역사를 썼다. 이 같은 역사는 강압이나 파벌 조성이 아니라 원칙에 충실한 종단 운영이 만들었다. 앞으로 한국 불교가 지켜야 할 원칙이며 종단 운영의 교과서로 삼아야 할 자랑스러운 발자취다.

박부영 기자 chisan@ibulgyo.com